

동북아역사 리포트



Vol. 41

NORTHEAST ASIAN HISTORY REPORT

2023년 6월 1일

2023년 검정 통과 일본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분석

위가야_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1. 머리말
2. 일본 교과서 문제의 어제와 오늘
3. 독도 서술 내용 분석
 - (1) 2017년 개정된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의 독도 관련 내용
 - (2) 독도 서술 내용
4. 한국사 관련 내용 분석
5. 맺음말

2023년 검정 통과 일본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분석

위가야_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1. 머리말

일본 문부과학성은 지난 5월 23일부터 도쿄 교과서연구센터에서 금년도 검정을 통과한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검정을 통과한 초등학교 교과서는 3개 출판사(도쿄서적, 일본문교출판, 교육출판)의 3~6학년 교과서 12종과 2개 출판사(도쿄서적, 제국서원)의 지도책 2종으로, 총 14종이다.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의 집필 기준이 되는 ‘학습지도요령(한국의 교육과정에 해당)’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은 2017년에 개정되었고, 2019년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에 처음 반영되었다. 이번 검정은 해당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이 두 번째로 반영된 결과이다.

일본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의 내용은 3~4학년에서 사회생활, 5학년에서 지리 분야(일본 지리+세계지리), 6학년에서 정치·일본사·국제(세계 속의 일본)를 각각 학습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에서 문제가 되는 내용은 교과서에 삽입된 지도와 지리 분야의 독도 영토주권 침해 및 일본사 서술에서 한국사 관련 사실을 왜곡한 부분이다. 해당 내용은 2019년 교과서와 대동소이하지만, 최근 일본 정부의 교과서 관련 정책 변화에 따른 서술 강제가 점차 확대 내지 구체화되는 것으로 여겨지는 부분이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학년	내용		
3	사회생활(시[市], 마을[町])		
4	사회생활(도[都], 부[府], 현[縣])		
5	지리 분야(일본 지리+세계 지리)		
6	정치	일본사	국제(세계속의 일본)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의 학년별 내용 구성

매년 3월 일본의 교과서 검정 결과가 발표되면 영토주권 침해 및 역사 왜곡에 대한 한국 정부의 항의와 이러한 항의를 내정 간섭으로 여기는 일본 정부의 수용 거부라는 대치 국면이 반복된다. 양국 정부의 반복되는 대치와 이로 인한 갈등의 심화는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에 큰 걸림돌이다. 특히 초등학교 교과서는 사회생활과 역사 인식 형성에 기초적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내용의 왜곡 여부를 확인하고, 문제가 있다면 문제의 해결에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먼저 일본 교과서 문제의 역사적 경위를 간단하게 정리하고, 금년 검정을 통과한 일본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에 나타난 독도 및 한국사 서술 내용을 검토하겠다.

2. 일본 교과서 문제의 어제와 오늘

일본 교과서 문제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이로 인한 사회적 논란은 일본 내부에서도 있었다. 1945년 패전 후 발간된 일본 교과서에는 전쟁 당시 일본의 침략 전쟁과 가해 사실이 기술되어 있었다. 이에 대한 보수 세력의 공격이 1955년부터 개시되면서 일본 교과서 문제가 시작되었다. 이후 일본 교과서 내용을 둘러싼 문제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보수 세력의 ‘교과서 공격’이 2000년대까지 3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국내외적 논란이 초래되었다. 이에 따라 교과서 내용에서 일본의 식민 지배와 침략 관련 기술이 삭제되거나 왜곡되고, 이후 비판받고 수정되었다가 다시 왜곡되는 일이 반복되었다. 이 과정에서 근린 아시아 여러 나라와 관계된 근현대의 역사적 사실을 다룰 때는 국제이해와 국제협력의 견지에서 필요한 배려를 할 것을 명시한 ‘근린제국조항’이 1982년 만들어졌다. 이어서 1993년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관방장관 담화, 1995년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총리 담화 등에서 일본군‘위안부’ 동원 및 침략 전쟁과 식민 지배에 대한 인정과 사과가 이루어지면서 교과서에 일본군‘위안부’와 ‘강제동원’ 문제가 서술될 수 있었다. 반면 이에 반발해 1997년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발족하고 이들이 만든 교과서가 2001년 검정을 통과했다. 이후 일본 정부의 보수화가 심화되면서 2006년 교육기본법이 교육 목적에 애국심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2014년에는 교과서 서술에 정부의 공식 견해 반영을 강제하는 내용으로 교과서 검정기준이 개정되면서 영토주권 침해와 역사 왜곡 서술이 확대되었다.

이처럼 일본 교과서 문제에서는 침략 전쟁과 식민 지배 사실의 인정과 사과라는 ‘정(正)’과 이에 대한 부정과 사실 왜곡이라는 ‘반(反)’이 서로에 대한 대응으로 반복된다. 2023년 검정을 통과한 일본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에서도 이러한 경향성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3. 독도 서술 내용 분석

1) 2017년 개정된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의 독도 관련 내용

교과서 집필은 일본문부성이 고시한 ‘학습지도요령’ 및 ‘학습지도요령 해설’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이를 반영하지 않은 교과서는 검정을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내용이 교과서 서술을 강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7년 개정된 초등학교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에는 독도, 북방영토(남쿠릴 열도), 센카쿠제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내용, 한국이 독도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으며 일본이 계속해서 항의하고 있다는 내용이 처음 기술되었다. 북방영토에 대해서는 러시아에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 센카쿠제도는 일본이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고유 영토이며 영토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언급하고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처럼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에 구체적인 서술 내용을 적시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라 할 수 있다. 즉 독도 등 영토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교과서에도 반영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명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학습지도요령(2017년 3월 고시) “5학년 사회”

‘영토의 범위’에 대해서는 竹島와 북방영토, 센카쿠제도가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라는 사실을 다룰 것.

학습지도요령 해설(2017년 7월 고시) “5학년 사회”

영토의 범위에 대해서는 竹島와 북방영토, 센카쿠제도가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라는 것을 언급할 것. (중략) 영토의 범위에 대해서 지도할 때에는 죽도와 북방영토(하보마이군도, 시코탄, 구나시리, 에토로후), 센카쿠제도는 한 번도 다른 나라의 영토가 된 적이 없다는 의미에서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라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竹島와 북방영토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이지만 현재 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에 의해 불법으로 점거되어 있다는 것과, 우리나라는 竹島에 대해서 대한민국에게 반복해서 항의하고 있다는 것과, 북방영토에 대해서 러시아연방에게 그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 등에 대해서 언급하도록 한다.

나아가 센카쿠제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현재 유효하게 지배하는 고유의 영토이며 영토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에 관해서 언급하도록 한다. 그 때에 우리나라의 입장은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적으로도 정당하다는 것을 전제로 지도하도록 한다.

2017년 개정 학습지도요령 및 해설의 독도 관련 내용

이상의 지침은 이미 2019년에 검정을 통과한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에 반영되었다. 2023년 검정 통과 교과서에도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 침해 내용이 반복해서 서술됐다.

2) 독도 서술 내용

3학년과 4학년 교과서에는 독도에 관한 설명이 없고, 다만 독도가 포함된 지도를 삽입하였다. 독도 관련 내용은 5학년 교과서부터 확인되는데, 3종 모두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인데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으며 이에 ‘일본이 계속 항의’하고 있다고 적었다. 교육출판 교과서에는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와 교섭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다.

일본 고유의 영토, 竹島와 센카쿠제도

시마네현 竹島는 일본의 영토이지만, 1954(쇼와 29)년부터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에 대해 반복하여 항의함과 동시에, 국제적인 장(場)에서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한국에 거듭해서 요청해 오고 있습니다(교육출판, 5학년 사회, 18쪽).

6학년 교과서는 3종 모두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로 적고 있으며, ‘한국의 불법점거’와 ‘일본이 계속 항의’한다는 내용은 도교서적과 교육출판 교과서 2종에만 들어가 있다.

한편 일본 고유의 영토인 竹島를 한국은 1954년부터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고, 일본은 항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도교서적 6학년 사회, 153쪽).

일본의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와 竹島를 둘러싼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일본 정부는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일본문교출판 6학년 사회, 22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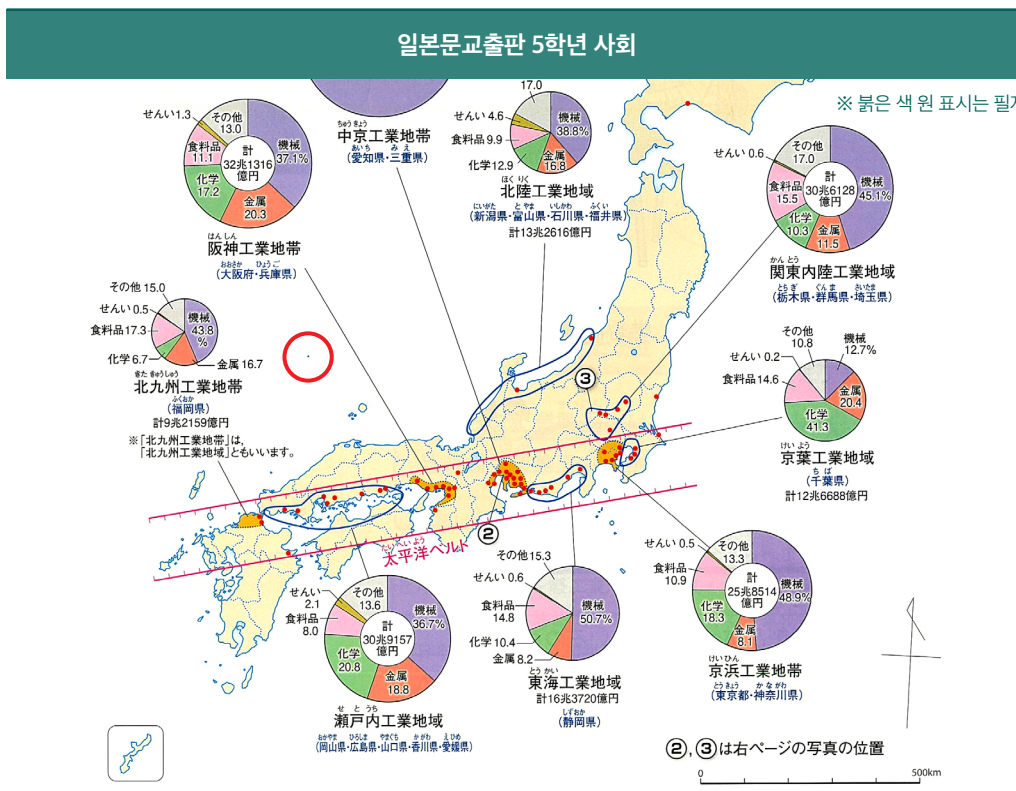
2019년 검정 통과 교과서와 비교하여 눈에 띄는 변화는 도교서적 5학년 교과서에서 “한국이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다”라는 문구를 “70년 정도 전부터 한국이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다”라고 수정한 것이다. 한국이 독도를 점거한 시기를 적시하여 지금은 비록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지만 그것이 패전 이후 혼란기에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침탈의 결과라는 주장을 주입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한편 검정 과정에서 서술 내용이 바뀐 사례도 확인된다. 일본문교출판 6학년 교과서에서는 일본의 영토인 북방영토와 竹島”라고 서술된 것이 검정 결과 “일본의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와 竹島”로 수정되었다. “아동이 오해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라는 수정 의견을 받아들인 결과다. 이는 영토문제에서 일본 정부의 입장을 강요한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이 실제 교과서 서술 내용을 강제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출판사(학년)	2019년 검정	2023년 검정
도쿄서적 (5학년)	일본해상에 있는 竹島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지만, 한국이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은 항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일본해에 있는 竹島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지만, <u>70년 정도 전부터</u> 한국이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은 항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일본문교출판 (6학년)	일본의 영토인 북방영토와 竹島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일본 정부는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u>고유</u> 영토인 북방영토와 竹島를 둘러싼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일본 정부는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독도 관련 서술 내용의 변화

이러한 강제는 비단 서술 내용뿐만 아니라 지도에서도 확인된다.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과 영해(領海)를 표기한 지도에 독도가 일본 영토로 그려지는 것은 물론, 주제를 막론하고 일본 열도 전역을 그린 지도에서 독도가 아무런 설명 없이 점으로 표기된 사례를 3개 출판사 교과서 모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실 이러한 표기는 2019년에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에서도 확인된다. 독도가 있어야 한다고 여겨지는 곳에 점이라도 찍어야 했던 이유는 독도를 일본 영토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이 무언(無言)의 강제로 작용한 데에 있을 것이다.



독도 위치에 '점'을 표기한 지도(2019년 검정통과본, 136쪽)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2023년 검정을 통과한 일본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에 독도 관련 내용이 어떻게 서술되었는지 간단하게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5학년			5학년		
	도쿄	일문	교육	도쿄	일문	교육
일본 고유 영토	○	○	○	○	○	○
한국 불법점거	○	○	○	○		○
한국에 계속 항의	○	○	○	○		○
한국과 교섭 노력			○			○
해결을 위해 신중히 대응					○	
국제사회에 일본 견해 전달			○			

2023년 검정 통과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의 독도 관련 서술 내용

4. 한국사 관련 내용 분석

일본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은 6학년 사회 과목에서 처음 역사를 배운다. 제도교육의 공간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공식적인 역사 교육으로, 학생들의 역사 인식이 형성되는 토대를 구축하게 된다. 따라서 편향되지 않은 서술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2023년 검정을 통과한 초등학교 6학년 사회 교과서의 한국사 관련 서술은 2019년 검정통과 교과서와 비교할 때 서술의 일부 문구를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수준으로 개정되었다. 다만 전체적인 서술 경향이 초등학생의 학습 수준에 맞춘 내용의 축약임에도 굳이 내용을 덧붙이거나 서술 내용을 수정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22년 검정을 통과한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의 한국사 관련 서술에서 가장 문제시된 것은 2021년 4월 27일 일본 정부의 각의 결정 내용에 따라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동원’ 관련 서술에서 강제성을 부인하는 개약이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 때문에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에서도 같은 맥락의 개약이 확인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우려가 있었다.

이러한 우려는 절반 정도는 현실이 되었다. ‘강제동원’ 관련해 기존 교과서(도쿄서적)에서 “다수의 조선인들과 중국인이 강제적으로 끌려와서 공장이나 광산 등에서 혹독한 조건 하에서 힘든 노동을 하게 되었습니다”라는 서술이 “다수의 조선인들과 중국인이 강제적으로 동원되어 공장이나 광산 등에서 혹독

한 조건 하에서 힘든 노동을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수정되었다. 연행에 가까운 ‘끌려와서’가 ‘동원되어’로 수정된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지만, 문장 전체를 볼 때 동원 자체의 강제성을 적극적으로 부정하는 서술 변경은 아닌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다만 병력 동원 관련해서는 강제성을 희석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같은 교과서의 이어지는 서술에서 “남성은 일본군 병사로서 징병당하고”가 “남성은 일본군 병사로서 참여하게 되었고, 후일 징병제가 시행되게 되었습니다”로 수정되었으며, 같은 페이지의 사진 설명에서 “병사가 된 조선의 젊은이들”이 “지원해서 병사가 된 조선의 젊은이들”로 수정되었다. 일제강점기 역사에 대한 배경지식이 부족한 초등학생들이 이러한 내용의 교과서를 읽는다면 조선의 젊은이들이 자발적으로 지원해서 병사가 된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크다. ‘지원’이라는 제도가 실제로 시행되었더라도 어떠한 상황에서의 ‘지원’이었는지에 따라 그 의미는 큰 차이를 보인다. 그런데 해당 교과서의 서술은 ‘길게 이어진 전쟁과 사람들의 생활’이라는 단원에서 전쟁에 희생된 일본인의 고충을 언급하면서 식민지배하의 조선인을 동일선상에 놓고 있다. 이렇게 가해와 피해의 경계가 불명확한 서술로는 일본 초등학생들이 식민 지배와 침략 전쟁이라는 과거를 직시할 수 없음이 자명하다. “전쟁으로 일본이 많은 나라들 특히 아시아 여러 나라의 사람들에게 대해 커다란 손해를 주었던 점도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시한 학습지도요령 해설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러한 서술 변경은 교육출판 교과서의 경우에 더욱 두드러진다. 해당 교과서는 “식민지였던 조선의 사람들에게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도록 하거나, 일본군 병사로 징병하여 전쟁터로 보내거나 했습니다”를 “식민지였던 조선의 사람들에게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도록 하거나, 일본군 병사로 전쟁터로 보내거나 했습니다”로 수정하여 ‘징병’이란 단어를 아예 삭제했다.

이 외에도 간토대지진(關東大地震)에 대한 설명에서 조선인이 살해된 내용을 삭제하고, 임진왜란에서 조선이 전쟁으로 입은 피해 내용을 모호하게 서술하거나 삭제한 일본문교출판 교과서의 수정도 개악에 가깝다. 이상의 내용은 다음 표로 정리할 수 있다.

출판사(학년)	2019년 검정	2023년 검정
도쿄서적	전쟁이 장기화되어 일본에 일손이 모자라게 되자 다수의 조선인들과 중국인이 강제적으로 끌려와서 공장이나 광산 등에서 혹독한 조건 하에서 힘든 노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조선인은 성명을 일본식 이름으로 바꾸게 한다거나 신사에 참배시킨다거나 하였습니다. 게다가 남성은 일본군 병사로서 징병당하고, 젊은 여성도 공장 등에서 노역시켜, 전쟁에 협력하게 하였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되어 일본에 일손이 모자라게 되자 다수의 조선인들과 중국인이 강제적으로 동원되어 공장이나 광산 등에서 혹독한 조건 하에서 힘든 노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조선인은 성명을 일본식 이름으로 바꾸게 한다거나 신사에 참배시킨다거나 하였습니다. 게다가 남성은 일본군 병사로서 참여하게 되었고, 후일 징병제가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젊은 여성도 공장 등에서 노역시켜, 전쟁에 협력하게 하였습니다.
	병사가 된 조선의 젊은이들	지원해서 병사가 된 조선의 젊은이들
교육출판	식민지였던 조선의 사람들에게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도록 하거나, 일본군 병사로 징병하여 전쟁터로 보내거나 했습니다.	식민지였던 조선의 사람들에게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도록 하거나, 일본군 병사로 전쟁터에 보내거나 했습니다. ※ "징병하여" 삭제
일본문교출판	1923년 9월 1일, 관동지방을 큰 지진이 덮쳤습니다. 피해를 입은 7개 부현 이재민은 약 340만 명, 사망자·행방불명자는 10만 5천여 명 정도였습니다. 도쿄에서는 지진 때 발생한 화재가 3일간이나 계속 되었습니다. 이러한 진재의 혼란 속에서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풀고 있다' 등의 잘못된 소문이 퍼져 많은 조선 사람들이 살해되는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사망자·행방불명자만 10만 5천명. 그중 도쿄에서 재난을 당한 사람은 대략 7만 명. 메이지시대 이후 최대의 지진. ※ 관동대지진 당시 학살이 있었던 사실을 서술하지 않음
	천하통일을 달성한 히데요시는 다음으로 중국(명)을 정복하려고 해서, 2차리에 걸쳐서 중국을 따르고 있던 조선에 대군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조선인들과 중국 원군의 격렬한 저항에 부딪혀, 전쟁에 지친 다이묘들은 히데요시가 죽자 병력을 철수시켰습니다. 히데요시가 조선에 병력을 보낸 결과, 조선의 국토가 황폐해지고, 많은 조선인들이 희생되었습니다. 한편 도요토미(豊臣)씨의 힘이 쇠퇴하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천하통일을 달성한 히데요시는 다음으로 중국(명)을 정복하려고 해서, 2차리에 걸쳐서 중국을 따르고 있던 조선에 대군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조선에서의 전쟁은 유리하게 진행되지 않아서 커다란 피해가 나올 뿐이었습니다. 이윽고 히데요시가 죽자 다이묘들은 병력을 철수시켰습니다. 이 일은 도요토미(豊臣)씨의 힘이 쇠퇴하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한국사 관련 서술 내용의 변화

이러한 수정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학습자 수준에 맞춘 내용의 축약 기조에 따른 것이라고 이해할 여지도 있다. 하지만 이번 초등학교 교과서의 검정 결과 분석을 통해 일본 교과서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 방안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축약되는 소재의 경향성에 질문을 던질 수 있다. 무엇이, 왜 축약의 대상이 되고 있는가? 그런데 이러한 문제 제기는 새로운 과제를 부여한다. 이러한 질문은 어디를 향해야 하는가?

5. 맺음말

일본 정부가 교과서 검정 제도를 이용하여 교과서 서술에 개입할 것이라는 우려는 검정 제도가 처음 도입될 때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된 문제이다. 역사학자 이에나가 사부로(家永三郎)는 1965년 교과서 검정 제도가 위헌이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997년까지 32년간 진행된 이 소송은 비록 교과서 검정 제도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끌어내지 못했지만, 일본 정부의 교과서 기술 통제를 일정 부분 제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2022년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 검정 과정에서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연행’에 대한 일본 정부의 표현 강제가 2021년 4월 27일 각의결정을 근거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일부 교과서는 여전히 일본군 ‘위안부’ 관련 서술에서 군의 관여와 동원의 강제성을 언급하거나, ‘강제연행’ 관련해서 ‘강제연행’이라는 용어에 각주를 달아 “2021년 4월 일본 정부는 전시 중 한반도에서 노동자가 온 경위는 다양하여, ‘강제연행’이라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각의 결정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강제연행에 해당하는 사례도 많다는 연구도 있다”라고 서술했다. 즉 일본 정부의 교과서 서술 개입에 소극적으로나마 저항한 집필자들의 노력이 엿보인다. 정부의 개입과는 별도로 교육 현장에서 학계 연구 성과를 반영하여 소신 있게 기술하겠다는 움직임 또한 확인되는 것이다.

일본 교과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여기서부터 풀어나가야 한다. 역사수정주의에 입각한 보수 세력의 교과서 공격은 아베 정권하에서 검정기준과 학습지도요령 및 해설 개정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런 상황에서는 교과서를 직접 서술하고 이를 이용해 현장에서 학습을 진행하는 연구자와 교사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은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의 연구자와 교사들의 협력이 수반될 때 좀 더 큰 추동력을 얻을 수 있다. 대화와 소통, 양국 학계의 견해 차이를 좁힐 공동 연구의 상설화 등 협력의 방법을 고민하고 실천에 옮겨야 한다. 흘러간 유행가 가사처럼 “우리 지금 만나”가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오늘이다.

| 참고문헌 |

- 조운수, 2022, 「2022년 검정 통과 일본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분석」, 『동북아역사리포트』 제14호
- 윤세병, 2020, 「일본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의 근현대사 인식 : 2019년 문부과학성 검정 통과본을 중심으로」, 『역사문화연구』 73
- 남상규, 2016, 「일본 교과서 문제의 역사적 경위와 실태 = 국제주의와 애국주의 길항」, 『한일관계사연구』 54

| 위가야 |

한국고대사를 전공했고, 한일관계를 포함한 고대 동아시아 국제관계사에 관심이 많다. 최근 연구로는 「2022년 검정 통과 고등학교 교과서 『일본사탐구』의 한국고대사 관련 서술 분석」(『한국사학보』 90, 2023), 「한국고대사 시대 설정에서의 가야사 위상 정립을 위한 시론적 논의」(『사림』 83, 2023), 「중국학계의 백제사 연구현황과 전망」(『동북아역사논총』 77, 2022) 등이 있다.

『동북아역사리포트』 지난 호는 동북아역사재단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창간호** 보존과 철거의 갈림길: 일제 인천육군조병창 유적의 현대사
- 제2호** 시진핑 시기 험한이 고조된 원인은 무엇일까
- 제3호** 남중국해 분쟁의 역사와 현황
- 제4호** 중국 역사 교과서에 나타난 역사 공정의 변화 -신간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 속 한국과 동북아-
- 제5호** 약속 이행을 촉구받는 일본 메이지산업유산: 침략전쟁과 강제동원의 그림자
- 제6호** 중국이 주장하는 '문화원조'의 배경과 문제점
- 제7호** 미쓰비시(三菱) 사도(佐渡)광산: 완전한 역사(Full History)와 보편적 인권 의식을 공유하기 위한 현장
- 제8호** 아프가니스탄과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 제9호** '종번(宗藩)' 해석과 중국 대외관계 인식
- 제10호** 서양 고지도로 확인한 우리땅 독도와 동해 표기
- 제11호** 일본의 사도광산 등재에 따른 대응 방안
- 제12호** (영문판)미쓰비시(三菱) 사도(佐渡)광산: 완전한 역사(Full History)와 보편적 인권 의식을 공유하기 위한 현장
- 제13호** 일본 언론에 공개된 '독도 사료'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제14호** 2022년 검정통과 일본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분석
- 제15호** 경찰 자료로 보는 램지어의 '태평양 전쟁의 성격' 비판
- 제16호** 중국 학계의 발해사 연구의 동인(動因)과 쟁점
- 제17호** 중국인에게 한국전쟁은 어떻게 기억되어 왔는가
- 제18호** 1947년 미 군정장관, 독도 출장을 허가하다
- 제19호** 역사문제와 한일관계 -일본은 사죄하고 반성했는가-
- 제20호** 2022년 일본 참의원 선거와 한일관계 전망
- 제21호**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미결의 과제
- 제22호** 광복 77주년, 한일관계의 회고와 전망
- 제23호** 한국·중국 수교에 가려진 한국·중화민국 단교 30년
- 제24호**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을 기억하자
- 제25호** 동북공정 20년, 현황과 과제
- 제26호** 중국에서 사라지는 우리 고대사
- 제27호** 한국과 베트남 관계 30년을 되돌아본다
- 제28호** (영문판)약속 이행을 촉구받는 일본 메이지산업유산
- 제29호** 중국 장성(長城)이 한반도 서북부지역까지 들어왔다고
- 제30호** 연·진·한 장성은 요동지역에 있었을까
- 제31호** 우리 역사 속의 러시아를 생각하며
- 제32호** 중국의 방어적 민족주의와 공세적 문화 주장
- 제33호** 독일-프랑스 역사 화해의 회고 그리고 동북아시아의 미래
- 제34호** 일본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해석전략에서 사라진 '강제(forced)'
- 제35호** 일본제국 전쟁사에 비추어본 21세기 일본의 안보전략 평가
- 제36호** 시진핑 3기와 천하주의 그리고 동아시아의 갈등
- 제37호** '중화민족공동체' 의식의 기원과 전개 과정
- 제38호** 음식도 발효를, 생각도 발효를 -김치와 파오차이의 차이-
- 제39호** 돌궐사의 시각에서 바라본 중국 대외관계사
- 제40호** 히로시마평화기념공원과 한국인원폭희생자위령비